

駐 일본 대사관 식약관 직무파견 심의 요청

(식품의약품안전처)

1 요청 개요

○ (요청내용) 직무파견(1명) 신규

파견기관	직급	정원	기간
주 일본 대사관	4급	1명	'23.8. ~ '25.7. (2년)

○ (파견목적) 일본 원전 오염수 대응강화 및 현행 수입규제 조치 유지를 위한 일본 식약관 직무파견 별도정원 요청

* 외교부 주재관 정원에 보건복지, 식약분야 일본주재관은 미포함

○ (요청사유) 원전오염수 해양방출('23.8.방류 검토중) 등 정책환경 급변

- 후쿠시마 사고('11.3) 이후 강화된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시행 중('13.9~)

* (수입금지) 8개현 모든 수산물, 15개현 27개 농산물, (증명서) 매 수입시 방사능 검사 후 미량이라도 방사능 검출 시 추가핵종 검사증명서 요구

- 일본 정부 오염수 방류 결정('21.4.13), 해양방출 설비 완성('23.6.30) 및 국제원자력기구(IAEA) 해양 방류 계획 안전기준 부합 발표('23.7.4)에 따른 국민과 언론의 불안과 우려 확산

<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 설문결과 >

- * 국민 10명 중 8명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걱정(한국갤럽, '23.6.30)
- * 오염수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 줄일 것 83.4%(제주연구원, '22.11)
- * 일본오염수 방류시 수산물 소비 줄일 것 72.3% (환경운동연합, '23.6.23)

- 국조실 중심으로 일일브리핑을 통해 정확한 정보 제공 중('23.6.15~)

* 국조실, 식약처, 해수부 등 부처 참여중이며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국장은 매일 참여, 식약처 차장 수시 브리핑

□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외교·통상적 대응

- 일본산 식품 등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, 일본의 20~30년에 걸친 오염수 방류 결정(‘21.4.)에 따라 ‘안전관리’와 ‘통상 마찰해소’ 간의 균형적 외교·통상을 위한 현지에서의 전문적인 대응 필요
 - *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 관련 우리나라의 WTO 승소(‘19.4)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조치 해제 요구 지속(‘19.4~), 우리 정부의 수입식품 안전검사 강화 조치(‘19.8) 등으로 지속적인 일본과 갈등 상황 존재
- 식품의 방사능 오염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며, 방사능의 반감기를 고려할 때 오랜기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현지 소통대응이 지속적으로 필요
- 특히 국제사회(EU 등)의 규제완화 동향에 따라 WTO/FTA*에 근거하여 일측은 “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조치 해제”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정부간 원활한 소통 및 신속 대응 필요

* WTO/SPS 5.7조

①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, ②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로부터의 정보 및 다른 회원국이 적용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, 입수가 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. ③ 이러한 상황에서, 회원국은 더욱 객관적인 위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하며, ④ 이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내에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재검토한다.

* 우리나라와 일본이 포함된 RCEP은 이미 발효하였으며, CPTPP 가입 신청을 고려 및 현재 IPEF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, 합의시 협의 채널이 늘어나고 수입규제 완화 압박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

- 일본의 WTO(SPS협정) 및 RCEP(SPS챕터)에 따른 회원국 간 투명성 및 협의 의무* 이행 요구에 대응
 - 수입규제 조치 유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질의 및 설명 요청에 대해 본국의 입장을 받아 전달 또는 협의 추진

*** RCEP 5.14조**

① 위생 또는 식품위생 조치가 다른 당사자와의 무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하는 경우 지정된 접촉선 또는 이미 설치된 연락채널을 통하여 그 식품위생조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 요청 가능 ② 당사자는 해당 조치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특정 사안에 관한 모든 우려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협의 개최 요청 가능, 피요청당사자는 합리적인 합의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 ③ 이러한 협의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요청의 접수 후 30일 내에 개최된다.

* 양국 간 화상 또는 대면 회의 진행을 위한 현지 기관 접촉 등

- IPEF 협상에도 SPS규범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의무와 협의 채널이 추가될 전망

○ **현행 수입규제 조치 유지**를 위하여 식약관 파견하여 위생평가에 필요한 추가적 정보 수집 필요 (국제법 의무이행)

- (사고 원전)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, 폐로 과정에서 추가적 방사능 오염 상황, 원전항만 주변 환경 및 생물 방사능 오염

* WTO/SPS 2.2조에 따라 일본의 식품 및 수산물 재배 환경이 제3국 또는 국내와 차별되어 추가적인 조치 가능

- (해수 및 해저토)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출된 방사능 오염물질로 인한 해양 및 해저토 오염 상황 및 이로 인한 생물 영향

- (농축수산물 등) 일본 내 방사능 모니터링 현황, 출하제한 품목설정, 고농도 방사능 검출 품목에 대한 분석 정보 등

- (정부 기관) 일본 농림수산업성, 후생노동성, 원자력규제위원회 등에서 발표되는 각종 방사능 관리 정보에 대한 정보

□ **일본산 수입규제 대응 핵심 부처는 식약처**

○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수입규제 완화·철폐 요구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 및 대응을 위해 일본 정부의 대응정책, 식·의약품에 대한 안전 영향 등 현지 동향의 신속한 파악이 중요한 상황

- 일본산 수산물, 농산물 등의 국내 수입 검사 및 수입 제한조치는 식약처에서 조치 및 대응하고 있음
- 일본의 WTO/FTA 분쟁제기·협약 요청시 수입규제 관련 대응 핵심 부처는 식약처이며 식약관이 일본현지 정보수집 및 일본측 논리에 대응 등 역할
-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시점으로 일본산 수산물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위해 현지 동향파악 및 현장 실태조사 필요

□ 타부처 주재관의 전문성 한계

- 식품, 의약품, 의료기기 등은 인체에 직접 적용되어 국민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제품으로 식의약품에 관한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
 - *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의료제품 분야 전문가의 현지 네트워크 구축·협력 중요성 확대
- 특히 문제가 되는 방사능 물질이 식품 섭취를 통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, 안전성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전문성이 필요하며
- 타부처의 주재관인 해수관, 농무관 등은 국내조치와 관련한 식의약품 제품 안전 및 품질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
 - * 주일대사관에서도 일본산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주재관 파견 건의('19.1.15)

	식약관	해수관/농무관	원자력관
주요 기능	- 식품 안전성 정보, 방사능 안전 관리 신속대응, 식품안전관리 (방사능 포함) 정책 동향 보고 - 식품 및 의료제품분야 신통상 규범(RCEP, IPEF 등) 대응 - 식품 및 의료제품분야 규제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	- 한일 어업협정 등 정책 동향 파악 - 농·축·수산물 검역 대응 - 농·축·수산물 대일본 수출 촉진 지원	- 후쿠시마 사고 폐로 현황 및 후속조치 파악 - 일본 원자력 정책 동향 파악 및 동북아 방사능 방재체제 구축

□ 일본산 식품 수입 제한조치 관련 대응 및 정책동향 파악

○ 일본산 수입식품 제한 조치에 대한 신속한 대응

- ✓ 일본산 식품에 대한 제외국 수입제한 조치 동향 파악
- ✓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관련 외무성, 원자력규제청, 수산청 등 동향
- ✓ 한·일 수산물 분쟁 관련 신속한 대응 지원 등
 - 수입식품 임시특별조치 관련 일본측 자료 검토 지원 및 WTO/SPS 회의 관련 일본 동향 파악 등

○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한 일본정부 정책동향 파악

- 식품방사능 기준치 설정 근거 자료, 식품 방사능 검사현황, 전국 지자체별 식품방사능 검사계획 등 수집
- 일본 내 식품 방사능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및 인식도 조사 등 모니터링

○ 식품 및 수산물 방사능 오염정보 수집

- 일본 전국 산지별·품목별 방사성 세슘, 시중 유통식품 및 가정 내 조리된 식사 중 방사성 검사정보 등 수집
- 후쿠시마현 해역 등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및 일본 전국 하천 민물고기에 대한 어종별 방사능 오염도 분석

□ 식품·의료제품 협력채널 확보 및 안전정보 수집·수출지원

○ 식품·의료제품 관계기관과의 교류 협력 및 소통채널 확보

- 후생노동성 등 규제당국 및 유관기관과 교류협력 강화
- 보건의료 비상상황 발생 시 의약품 지원, 백신 등 수급 지원 등 일본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

○ 식품·의료제품 안전성 정보수집 및 우리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

- 바이오헬스 첨단제품 개발·승인 및 허가심사 정책, 규제동향 파악
- 식·의약품 안전·위해정보 수집 및 분석, 수출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

- WTO/FTA 규범에 합치하는 일본산 수입식품 수입제한 조치를 위한 대응 강화
 - WTO/FTA 규범에 따라 수입규제를 유지하기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위생정보 수집이 반드시 필요
 - 일본 내 식품 방사능 오염상황 및 정책동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파악으로 수입규제 유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
 - 일본 정부 및 언론 등을 통한 정보 취득은 정확한 사실 확인 및 신속한 대응에서 한계가 있음
- 일본 방사능에 대한 위해정보 수집 및 신속한 안전사고 예방
 - 일본에서 발생하는 식품 위해정보 중 안전성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대한 정보는 식약관의 정확한 위해정보 파악 등을 통해 수입 통관 단계에서 신속한 조치
 - 일본 오염수 방류로 인한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현황 등 일본 현지 동향의 신속한 파악
- 식·의약품 규제당국 간 교류 활성화로 네트워크 구축 및 수출지원
 - 분야별 주요 교역국가로서 국제협력 및 규제당국과의 협력 모색
 - * (식품분야) 수입 3위·수출 2위, (의료제품 분야) 수입 4위·수출 5위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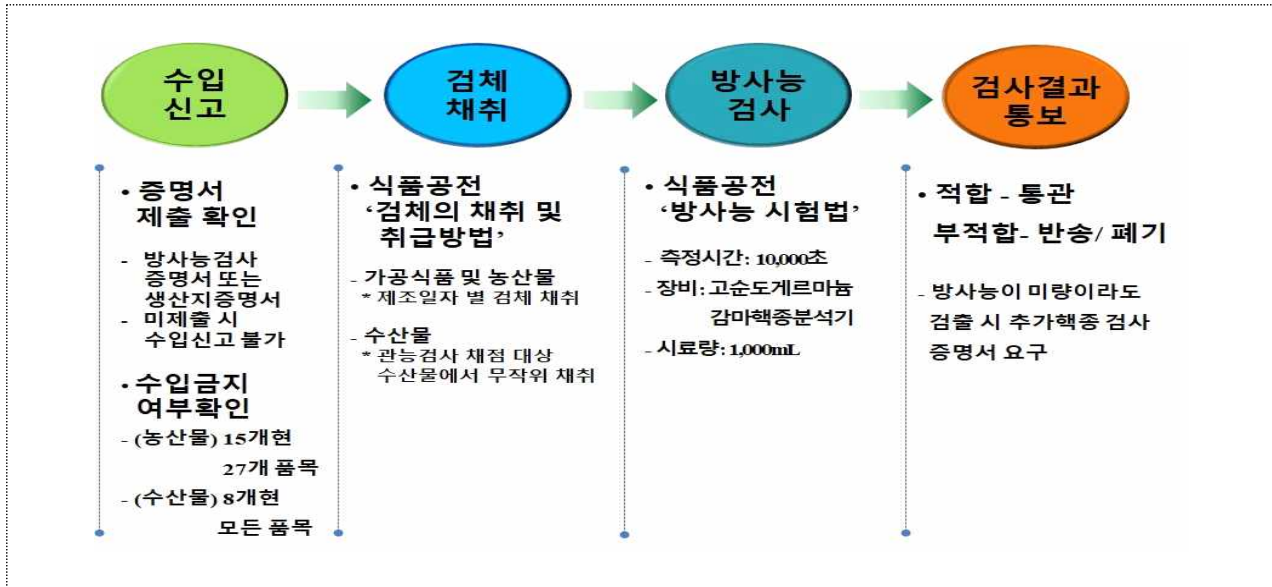
참고 1

일본산 수산물 수입통관 절차

구분	사진	내용
수입신고 접수 및 서류검사		▶ 수입자가 품목별(어종별)로 수입신고 ▶ 식약처 검사관이 일본정부에서 발행한 생산지증명서를 확인하는 등 서류검사 실시
현장검사	# 보세장치장 이동 및 화물확인 	▶ 검사관이 현장에서 화물관리표 및 수입업체, 제품, 수조번호, 수량 등 확인
	# 보세장치장 현장검사 	▶ 오감을 이용한 관능검사* 실시 * 활수산물의 경우 외관, 색깔, 선별 및 활력도 검사 ▶ 적합한 경우 정밀검사(방사능 등) 검체 채취 * 「식품공전」의 검체채취 방법에 따라 대표성 있는 검체를 채취(CODEX 기준 부합) 예) 활가리비 수입량이 1톤이상 ~ 3톤 미만인 경우 검사관이 검체채취 규정에 따라 5개 지점에서 약 4kg에 해당되는 검체를 채취 (가식부위 1kg 이상) ▶ 채취된 검체 봉인 후 시험분석센터 이동
정밀검사 (방사능)	# 검체 전처리 및 균질화 	▶ 검체에서 가식부위를 채취 후 분쇄기로 균질화 * 어느 부위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분쇄하여 균질화
	# 방사능 검사 측정 	▶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 분석기 분석 * 방사능 1건당 분석시간은 10,000초(2시간47분)
결과	(불검출) 국내유통, (미량검출) 추가 핵종증명서 요구, (기준초과) 반송 또는 폐기	

참고 2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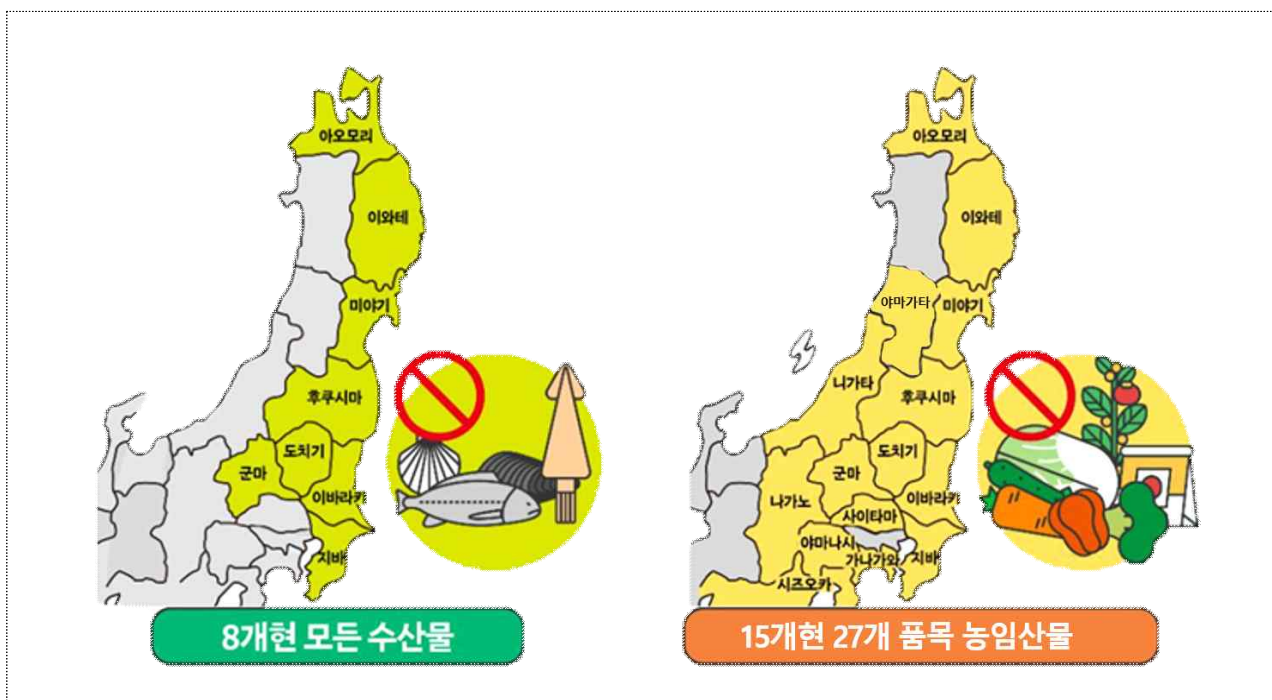
□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절차



□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현황

○ (수산물) 8개현 모든 수산물(멍게, 가리비, 참돔 등)

○ (농산물) 15개현 27개 품목(버섯, 쌀, 고사리, 대두 등)



※ 지역(현)별 일본산 농산물 수입금지 품목

구분	지 역	수입금지 품목
1	후쿠시마현	엽채류, 결구엽채류, 순무, 버섯류, 죽순, 청나래고사리, 매실, 유자, 밤, 쌀, 키위, 고추냉이, 두릅, 오가피, 고비, 고사리, 대두, 팥, 땅두릅(독활)
2	지바현	엽채류, 엽경채류, 차, 버섯류, 죽순
3	도치기현	시금치, 카키나, 차, 버섯류, 두릅, 죽순, 청나래고사리, 산초, 오가피, 고비, 고사리, 밤
4	군마현	시금치, 카키나, 차, 버섯류, 오가피, 두릅
5	이바라키현	시금치, 카키나, 파슬리, 차, 버섯류, 죽순, 오가피
6	가나가와현	차
7	미야기현	버섯류, 청나래고사리, 죽순, 오가피, 고비, 메밀, 대두, 쌀, 고사리
8	이와테현	버섯류, 오가피, 고비, 고사리, 미나리, 죽순, 메밀, 대두
9	나가노현	버섯류, 오가피
10	사이타마현	버섯류
11	야마나시현	버섯류
12	아오모리현	버섯류
13	시즈오카현	버섯류
14	니가타현	오가피
15	야마가타	버섯류

참고 3 제외국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현황

-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 55개국이 수입규제를 시행하였으며,
현재 12개국이 수입금지 및 검사증명서 제출 조치 유지
- 수입금지 (중국 등 5개국), 검사증명서 제출 (EU 등 7개국)
- * 수산물 수입금지 : 중국, 한국, 마카오

	국가(지역)	수입금지 대상 지역	품목
수입 금 지 (5)	홍콩	후쿠시마	과일, 우유, 乳음료, 분유
	중국	10개현	모든 식품(수산물 포함), 사료
			단, 니가타현 쌀 제외
	대만 (‘22.2.8)	5개현	야생조수육, 버섯류, 오가피
		지역 제한 없음	일본 자체 출하제한 품목
	한국	8개현	수산물
		15개현	27개 품목 농산물
	마카오	후쿠시마	채소, 과일, 수산물, 수산가공품 등
증명서 (7)	EU, 아이슬란드, 리히텐슈타인, 노르웨이, 스위스, 프랑스령 폴리네시아, 러시아		

* 해제(43) : 미국(‘21.9.22), 영국(‘22.6.29), 인도네시아(‘22.7.27), 캐나다, 칠레,
베트남, 필리핀 등

오염수 처리계획 검토내용 발표

- 브리퍼 :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-

③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관련

- 현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
- 우리 정부가 '13년 9월에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, '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로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,
- 일본 정부가 이번 오염수 처리 계획하에 시행하는 방류와는 전혀 무관한 조치입니다.
- 정부는 이러한 논리를 떠나, 우리 국민들께서 먹거리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불안도 느끼지 않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- 그러므로 정부는 '13년 9월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,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 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.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국민 안전이 기준입니다
YOUR SAFETY IS OUR STANDARD

일본산 수산물 수입단계 방사능 검사 물살틈없이 철저하게 이뤄집니다!

☑ 원전사고 인근 8개 지역산 수산물 수입 금지

- 후쿠시마현, 이바라키현, 도치기현, 군마현, 지바현, 미야기현, 이와테현, 아오모리현

☑ 방사능 검사

- 수입 금지된 8개 지역산 이외의 일본산 수산물은
매 수입건마다 방사능 검사 실시

- 방사능 미량 검출 시 17종의 추가 핵종에 대한
방사능 검사 증명서 요구 → 미 제출 시 전량 반송 조치

☑ 증명서 제출 의무화

- 생산지 증명서 : 47개 모든 지역산

※ 일본산 모든 수산물 방사능 검사 철저하게 추진



참고 6

일본식약관 운영 연혁

연번	구분	직무파견 기간	비고
1	별도정원	14.3.17~16.1.31	2년 승인
2		16.2.1~17.1.31	1년 연장
3	비별도정원	17.3.6~18.3.5	
4		18.3.6~19.1.31	
5		19.4.8~20.4.7	
6		20.4.15~21.4.14	
7		21.4.15~22.4.14	

* 22.4 비별도 파견 중단

(1) 일본 내 식의약 분야 정보 수집 · 분석 · 공유

1. 식품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동향, 제외국 수입제한조치 동향 등

- ✓ 일본산 식품에 대한 제외국 수입제한조치 동향 파악(수시)
- ✓ 식품방사능 기준치 설정 근거 자료, 식품방사능 검사 가이드라인(원자력재해대책본부 발표), 전국 지자체별 식품방사능 검사계획 자료 등 수집
- ✓ 식품방사능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및 소비자 인식도 실태조사 정보 수집
- ✓ 한·일 수산물 WTO 분쟁 중 및 상소판정('19.4) 이후 일본 정부 및 언론 동향 파악 등
- ✓ 일본산식품 수입규제 완화 위한 EU 등 기타 국가와의 협의동향 분석
- ✓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'해양방류' 공식 결정('21.4월)에 따른 일본 및 제외국 동향 파악(지속)

2. 식품 및 수산물 방사능 오염정보, 식품 출하 · 섭취제한 정보 수집

- ✓ 일본 산지별·품목별 식품 방사능 오염 정보 수집·분석 및 대사관 홈페이지 게재
 - 세슘 모니터링 검사결과(격주),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검사결과(수시), 식품 출하제한 설정 및 해제(수시) 정보 등 등
 -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식 결정('21.4) 이후, 식품 중 방사성 세슘 모니터링 동향 매주 보고
- ✓ 식품으로부터 노출되는 연간 방사선량, 식품 방사능 관련 실태조사
- ✓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식 결정('21.4) 이후, 식품 중 방사성 세슘 모니터링 동향 매주 보고
- ✓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및 일본 전국 하천 민물고기기에 대한 어종별 방사능 오염도 분석 자료 수집
- ✓ 일본 원전동향, 식품으로부터 노출되는 연간방사선량 등 정보 수집·분석
- ✓ 원자력재해대책본부 등 발표 '식품 출하제한 및 섭취제한 설정·해제' 정보 수집
- ✓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조치 관련 미국, EU 등 각국 동향 파악 등

3. 식의약 분야 정책 · 제도 동향 및 안전정보 수집 · 분석

- ✓ 라니티딘성분 발암물질 검출 관련 일본 정부 대응 동향 보고
- ✓ 일본 온라인쇼핑몰에서 유통되고있는 대마 함유제품 관련 후생노동성 정보확인
- ✓ 건강기능식품 등에서의 의약품성분 검출결과 관련 안전성 정보 보고
- ✓ 일본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의 한국 수출 관련정보 보고
- ✓ 일본 신규 마약류 지정 동향 보고(수시)
- ✓ 일본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및 농약잔류기준 변경 정보
- ✓ 메트포르민 염산염 함유 제제 자신회수 정보 보고(발암물질 미량 검출)
- ✓ 의약품 산업정책 추진 '의약품 산업비전 2021' 발표 동향 보고

4. 코로나19, 백신, 치료제 등 관련 현황 및 안전정보 수집·분석

- ✓ 일본 내 코로나19 발생 동향의 신속 보고를 통해 국내 방역 대비 및 활용
 - 일본 코로나19 발생 동향 보고 현황 : ('20)144건 → ('21)219건
 - ✓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발생 현황
 - ✓ 백신·치료제에 대한 후생성의 신속(특례)승인 현황 및 제도 절차 등에 대한 정보수집·분석
 - 일본 백신·치료제 보고 현황 : (부작용 현황)21건, (허가·승인 동향)75건
 - ✓ 마스크에 관한 일본산업규격(JIS) 제정 동향 보고
 - ✓ '일본 내 마스크 등 생산 및 수입 실태' 정보 보고
-

[2] 한-일 양국간 식의약 분야 공식 채널 역할 수행

○ 한-일 양국간 식의약 분야 현안사항 해결지원

- 코로나19로 실시간 화상 모니터링을 통한 수출국 업체 비대면 현지실사를 실시하기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 및 농무성 협의 지원
- 일본 내 중국산 KF94 모조품 유통 차단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업체와 소비자청에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요청
- 對일본 수출 식품의 위생증명서 서식 제정의 원활한 합의 지원
 - * ① 식육·알·유가공품의 위생증명서 서식 ② 굴·복어에 대한 위생증명서 서식

○ 한국산 수입 식품 수입규제 대응

- 한국산 식품에 대한 검역·검사 강화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동향 수집

-
- ✓ 한국산 납치에 대한 수입모니터링 검사 강화(19.6월~)
 - ✓ 복어 등에 대한 수출위생증명서 첨부 의무화 제도 신설(20.6월~)
 - ✓ 피조개 등 이매패류에 대한 검사명령 조치(2020.7월~)
-

- 일측 검역당국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수입규제 움직임에 대한 사전 대응 및 대책안 마련 지원
-

- ✓ 이매패류 패류독소 검출에 따른 원인규명 및 일측 검사명령 조치 완화 관련 협의 지원
 - ✓ 20.6월부터 굴·복어에 대한 위생증명서 제도 신설에 따라 증명서 양식 등 관련 공식협의 지원
-

○ 국내기업 일본 수출지원

- 양국 간 관리 규정 차이로 발생하는 식품·의료제품 분야 수출 고충사항 해결을 위해 규제당국 간 협의 지원
- 일본 유제품 수출시 일본 검역소에서 위생증명서에 대해 추가확인 요청 사항에 대해 후생성과 협의하여 신속히 검역(240톤)받을 수 있도록 지원
- 타 주재관(농무·수산)과의 협업 및 현지 업체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고충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우리나라 수출업체 지원

[3] 일본 후생노동성 주관 회의 참석 및 결과 공유

- 후생노동성 주관 ‘식품수입원활화추진회의’ 등 일본정부 주관 식·의약품 분야 회의 참석 및 대응(매월)
- ‘게놈편집기술 응용식품 시판 허용 관련 설명회’ 등 참석을 통해 일본 정책 현황 등 공유